

전남 사립학교 부당 채용 솜방망이 처벌

전남지역 사립학교 교장이 며느리를 부당하게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일부 학교는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채용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논란이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교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며느리를 9급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며느리가 응시할 경우 기족관계인 교장은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본인이 면접심사위원장을 하고 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부당하게 위촉한

"성적우수자 야자 전용 공간 제공은 차별 행위"

학별없는 사회

학별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하 '학별없는사회')은 13일 광주 모교당학교가 특정 학생들에게만 아간자율학습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학별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모교당학교는 2~3학년의 경우 아간자를 학습시 기숙사 입사자들이 학교 내 전용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별없는사회는 "자율학습 전용 공간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하거나, 특정 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차별적 인식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별없는사회는 "성적 우수자로 구성된 기숙사 입사자가 아간자율학습 전용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심화반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위반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이 학교의 사례가 일부 성적 우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정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인호 기자



심사 제척대상 면접위원장 맡아 최고 점수 부여 일부 학교 채용절차·서류도 없이 행정실장 채용 도교육청, 징계양정 준용 않고 경징계 마무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PC자격증이 없는 며느리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을 쥐 합격시켰다.

전남지역 또 다른 시립학교법인 3곳은 학교장이나 법인이사회 특수관계가 있는 3명을 적법한 채용절차나 채용서류도 없이 6급 행정실장과 사무직원으로 채용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채용비리가 적발

된 시립학교법인 관계자들을 경고 처분하도록 해당 법인에 요청하는 것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관계자들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을 준용해 양벌할 수 있는데도 시립학교법인이나 해당 시립학교법인 정관 등을 적용한 뒤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은 채용비리

관계자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중징계 요청하고 있어 전남도교육청의 정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에서 이번 채용비리가 적발돼 교육부 감사처분 내용에 따라 징계를 마무리했다"며 "시립학교 징계권한이 법인 이사회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폭염 속 뜨거운 도심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여의도 도로에 자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

남광주시장 철제구조물 사고...경찰 "시공업체 등 조사"

시장 상인 등 8명을 다치게 한 광주 남광주시장 철제구조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사고가 발생한 남광주시장 철제구조물의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4시12분께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에서는 입구 쪽 현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해 정도(64)씨 등 시민 2명과 시장 상인 4명이 창파상을 입거나 머리와 어깨를 다쳤다.

무너진 철제 구조물은 가로 20m, 세로 5m 크기로, 지난해 9월께 '남광주범기차아시장' 개장을 준비하며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제구조물에는 야시장을 상징하는 달과 별 모양의 장식물과 전등이 매달려 있었다.

동구는 철제구조물을 포함해 '남광주범기차아시장' 무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 3억4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경찰은 설치한 지 1년이 채 안 된 철제구조물이 무너진 원인과 부실 공사 여부를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시장 상인들도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발생했다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안전사고 리고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상인들은 "구조물이 떨어진 시간대에는 손님이 비교적 많지 않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이지만 1년도 안 된 구조물이 떨어진 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공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실 시공 등 문제가 있으면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구도 광주시의 구조기술자와 함께 이날 사고 현장에서 구조 진단과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인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유일의 먹거리 특화시장인 '남광주범기차아시장'은 행정자치부 2015년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1월 성공리에 개장했다.

조인호 기자

승용차 바퀴에 발 넣어 합의금 받아낸 6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승용차 앞 바퀴에 일부러 발을 넣어 넘어진 뒤 진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김보(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은행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임모(45·여)씨의 승용차 왼쪽 앞 바퀴에 발을 일부러 넣어 다친 뒤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 블랙박스 등에 녹화된 사고 장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우회전하던 중 자신을 발견하고 급정지한 임씨의 승용차에 고의로 발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 경찰에 "어울마다 일방적으로 물고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의로 발을 넣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벌였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사기범죄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5억 대 금괴 밀수 국제조직원 검거

이른바 '줄랄지 세탁' 수법으로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밀반입한 국제금괴밀수조직이 인천세관(세관)에 불집혔다.

13일 세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괴 70kg을 밀반입한 혐의로 일본인 남성 Y 씨(남·24세)와 국내 총책 한국인 H 씨(남·49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금괴의 국내 유통을 담당한 가담자 3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인 Y 씨는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전문적으로 금괴를 밀수하는 국제금괴밀수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금괴밀수 우범 지역인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뒤 밀수의 위험성이 낮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해 환승 절차를 미친 후 미리 포섭한 3~4명의 일본인 운반책들과 금괴를 들고 국내로 입국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가 취약한 심야시간대를 택했다.

출입국 횟수가 적은 운반책들을 고용해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은 이번에 밀반입된 금괴가 서울 종로 일대로 판매된 것으로 보고 귀금속 도매업자들에게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밀수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금괴 조작 밀수 특별수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일본,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동 수사로 환승 금괴 밀수조직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돈 받으려고' 112 허위신고 30대 감옥행

112 허위신고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 신북지원이 112 허위신고를 일삼은 A(31)씨에 대해 구류형 3일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던 중 순전에서 출로 살고 있는 어머니 B씨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 허위신고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포천시 신북면에 거주하면서 지난 4월부터 6월1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모친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 경찰청 범죄신고센터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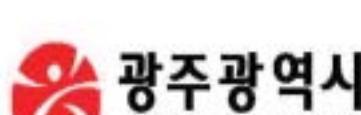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B씨가 수시로 용돈을 보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 병력을 출동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어머니 B씨는 용돈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허위 신고 요주의로 지목, 6월14일 출동 당시 또 거짓말로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허위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월11일 A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최근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사랑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